

일자리를 ‘만드는’ 정치에서, 자동화 이익을 ‘귀속시키는’ 정치로: 이재명 정부와 현대차 노조를 동시에 비판한다

2026.2.5. 이상연

최근 이재명 정부는 재계 총수들과 만나 청년 고용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이런 접근은 필요하다. 청년에게는 “지금 당장 들어갈 자리”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자동화(AI·로봇)가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는 국면에서는, “투자로 일자리 만들기”의 효율이 구조적으로 떨어진다. 같은 투자라도 예전만큼 사람을 뽑지 않는다. 설비가 늘어도 그 설비는 사람을 더 고용하기보다 사람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그래서 자동화 시대의 핵심 질문은 “일자리를 얼마나 더 만들까”가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늘어나는 생산성 이익(초과이익)을 누가 지속적으로 받게 할까”다. 임금은 소비(유효수요)의 핵심 축인데, 자동화가 임금 몫을 누르면 시장 자체가 흔들린다. 이 문제를 “적응하라”는 훈계나 “창업하라”는 각자도생으로 처리하면, 결국 기업도 이익을 실현할 시장을 잃고, 사회는 분노의 정치와 급격한 규제·과세 같은 불확실성으로 치달는다.

따라서 해법은 “로봇을 막자/빨리 적응하자”가 아니라, 자동화로 생기는 생산성 이익이 **사회로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귀속 규칙**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쪽이어야 한다. 가장 대중적인 출발점은 우리사주(ESOP)처럼 “노동에 소유를 붙이는” 원리다. 다만 노동이 대체되는 시대엔 이를 “직원 내부”에만 묶어둘 수 없다. 사회형 우리사주처럼, 자동화로 만들어지는 추가 이익의 일부가 국민 전체의 공적 계정(가령 ‘국민사회지분계정’)으로 **지분권/수익권 형태로 자동 귀속**되도록 룰을 고정해야 한다. 복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생산성 이익이 생길 때마다 **지속 배분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배관**을 까는 것이다.

1) “왜 자본 지분을 건드리냐?”에 대한 답: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다

여기서 자본가는 묻는다. “왜 지분을 건드리냐?”

답은 간단하다. **자본을 벌주려는 게 아니라, 자동화가 임금 기반 수요를 약화시키는 상황에서 시장(유효수요)을 유지해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장치**다.

- **지분을 안 건드리면 자본도 손해**다. 생산은 늘어도 구매력이 꺼지면 매출 기반이 흔들리고 이익 실현이 막힌다.

- “세금으로 하면 되지”라는 반론은 맞지 않다. 세금·현금지원은 예산·정권에 따라 흔들리고, 소유·현금흐름·결정권의 집중은 그대로 남는다.

· 반면 **롤 기반 지분/수익권 귀속**은 생산성 증가와 자동 연동되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한 작은 비용”으로 “예측 불가능한 큰 정치 리스크”를 줄이는 보험이다.
즉, 사회귀속은 반자본이 아니라 **자본친화적 안정장치**다.

2) 이재명 비판: “거대한 수레”와 “창업”은 정치(귀속 설계)를 회피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차 로봇 논쟁을 두고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나아가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달아버리면, 자동화의 핵심인 귀속 규칙 설계(소유·배당·의결)는 증발한다. 남는 건 개인의 적응과 리스크 부담뿐이다.

· “적응”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못 푼다. 자동화가 만드는 위기는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귀속 구조의 문제다.

· “창업”은 해법이 아니라 전가가 되기 쉽다. 모두가 창업해 모두가 성공할 수 없고, 실패 리스크는 개인이 떠안는다.

· 국가는 “적응을 주문”하는 곳이 아니라, 자동화가 만든 이익이 사회로 환류되도록 규칙을 설계하는 곳이어야 한다.

요약하면, 이재명식 담론은 “속도”는 말하지만 “권리(귀속)”는 말하지 않는다. 자동화 시대에 이 조합은 포획(편중) 고착으로 간다.

3) 노조 비판: ‘봉쇄 언어’로는 귀족노조 프레임을 못 끊고, 장기전에서 진다

현대차 노조의 불안은 현실이다. 그러나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못 들어온다”는 봉쇄형 문장은 최악의 선택이다.

· 이 문장은 대중에게 즉시 “반기술/기득권 방어”로 번역된다. 그 순간 ‘귀족노조’ 공격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발동한다.

· 봉쇄가 강할수록 기업은 “그럼 자동화는 해외에서”라는 선택지를 강화한다. 국내 고용을 지키려다 국내 자동화의 사회계약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다.

· 결정적으로 노조가 놓친 전장은 “도입을 막느냐”가 아니라 “도입 이익을 어떻게 귀속시키느냐”다.

노조가 사회적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거부권”이 아니라 “조건부 승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안전·전환교육·재배치·감시(데이터)·이익귀속·공동결정을 계약으로 고정하되, 특히 **원하청·정규비정규·청년까지 이익이 퍼지는 귀속 규칙**을 노조가 먼저 제안해야 ‘귀족노조’ 프레임을 구조적으로 끊을 수 있다.

여기서 노조가 사회 전체를 향해 촉구해야 할 문장은 분명하다.

“우리는 로봇 도입 자체를 막자는 게 아니다. 자동화율(노동대체 정도)이 높아질수록 생산성 이익의 일부가 ‘국민사회지분계정’ 같은 공적 계정으로 지분권/수익권 형태로 **자동 귀속**

되도록 하는 규칙을 **사회 전체가 함께 논의하고 제도화**하자. 그 귀속은 정규직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어서 안 된다. 하청·비정규·실업자·청년은 물론, 통계와 뉴스에 잘 잡히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가난에 허덕이며 버티는 사람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소유와 환류’가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요구할 때 노조는 “기술을 막는 집단”이 아니라 자동화 시대의 사회적 귀속 규칙을 제안하는 주체로 재정의된다. 그게 노조가 살 길이고, 동시에 사회가 살 길이다.

4) 총수들과의 자리에서 정부가 꺼내야 할 한 문장

이재명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투자를 말한 다음, 다음 문장 하나를 “넌지시”라도 붙이면 게임이 바뀐다.

“투자는 계속 필요하다. 다만 자동화로 노동대체가 빨라질수록 유효수요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업 단위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자동화율(노동대체 정도)에 연동해 생산성 이익의 일부가 ‘국민사회지분계정’ 같은 공적 계정으로 지분권/수익권 형태로 자동 귀속되는 규칙**을 함께 설계해보면 어떨겠나.”

이 한 문장이 있어야 정부는 “훈계하는 정부”가 아니라 “규칙을 설계하는 정부”가 된다.

4) 결론

노조는 봉쇄로, 대통령은 적응·창업으로 문제를 처리하려 한다. 둘 다 핵심인 귀속 규칙을 비워둔다. 그 공백이 유지되는 한 자동화 이익과 결정권은 위로만 쌓이고, 임금 기반 구매력은 약해져 유효수요가 흔들린다.

정치는 이제 “일자리를 만들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생산성 이익을 사회가 지속적으로 배분받도록, 지분/수익권의 자동 귀속 규칙을 선제 구축하는 정치로 이동해야 한다. 그 출발점으로 “사회형 우리사주(우리사주의 사회 확장)”만큼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카드가 없다.